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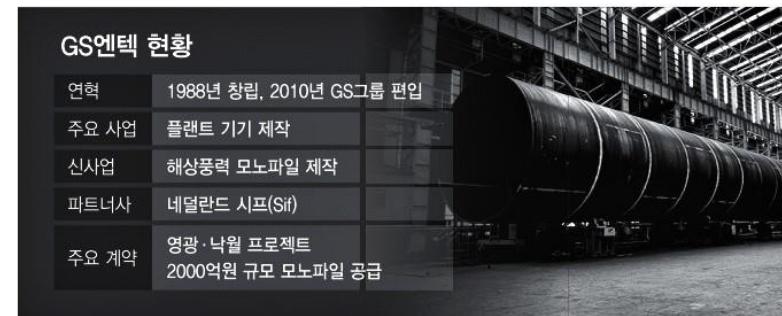
# 신무기 들고… GS엔텍, 해상풍력 새바람

“빠르면 다음달 첫 모노파일 제품이 출고됩니다. 해상풍력 시장을 향한 항해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지난 23일 오전 울산 남구에 위치한 GS엔텍 용암공장. GS그룹 해상풍력 사업의 교두보 격인 이곳은 설비의 하부구조물인 ‘모노파일’ 제품을 만드느라 분주했다. 모노파일을 새 먹거리로 낙점하고 사업을 준비한 지 2년.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정용한 대표(사진)는 “데뷔전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GS엔텍은 울산 남구의 터줏대감이다. 이곳에 자리잡은 지 40여년째다. 공장은 늘 같은 곳에 있었지만 사업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1988년 대경OKE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는 원래 가스·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설비를 제조했다. 그러나 GS그룹이 2010년 인수해 간판을 GS엔텍으로 바꿨다. 이후로도 본업은 플랜트 설비 제조였다. 한때 수주가 몰리고 흑자를 내던 회사는 위기를 맞게 된다. 정 대표는 “대부분 제조업이 그렇듯 중국의 저가공략에 시달렸다”며 “2020년부터 원점부터 사업방향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신사업으로 준비한 게 해상 풍력 하부구조물인 모노파일 제조다. 모노파일은 바다 밑에서 거대한 해상 풍력발전기를 지탱해주는 구조물이다. 길이가 통상 80m며 큰 것은 100m가 넘는다. 정 대표는 “대형곡면 철판을 튼튼히 용접해 바다 밑에서 20년 이



이는 더 큰 시장인 일본 공략을 위한 트랙레코드(수주이력)도 된다. 일본은 해상 풍력 발전을 2030년엔 현재의 30배 규모인 5.7

GW(기가와트)로 늘리고 2040년엔 240배 이상인 45GW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부구조물의 경우 대부분 GS엔텍의 모노파일 방식을 채택한다. 일본 현지엔 JFE엔지니어링이 모노파일 공장을 설립 중이기는 하나 GS엔텍과 같이 기술이 겹친 대규모 모노파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 사실상 없다. 업계에선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하부구조물 시장만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다. 정 대표는 “모노파일은 1000톤 내외의 대형 금속구조물인 만큼 막대한 물류비가 발생해 원거리 공급은 사실상 쉽지 않다”며 “때문에 시프 역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최적의 현지 우군을 찾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GS엔텍은 364.8MW(메가와트) 규모의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64기(2000억원 규모)의 모노파일을 공급한다. 빠르면 다음달에 나올 첫 모노파일 제품부터 내년 9월까지 납품하면 GS엔텍은 새 먹거리인 해상풍력 사업에서 매출을 일으키게 된다.

**하부구조물 ‘모노파일’ 제작**  
**내달 첫출고·내년까지 납품**  
**데뷔 임박… 새 먹거리 기대**  
**업계 1위와 전략적파트너십**  
**일본 시장 진출 발판 역할도**

상 버티게 만들어내는 게 모노파일 제조”라며 “설비안전을 최우선으로 세밀한 용접을 통해 만드는 화공 플랜트 설비사업과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같았다”고 말했다. GS엔텍의 재탄생은 ‘친환경을 통한 미래성장’이라는 모토를 내세운 GS그룹의 새 비전과도 맞물렸다.

새 출발을 함께할 든든한 우군도 생겼다. 유럽 해상풍력 모노파일 시장의 40%를 점유한 글로벌 1위 기업 네덜란드 시프(Sif)였다. GS엔텍은 2022년 시프와 기술제휴를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세계 1위와 손잡

# GS건설 회사채 720억 미매각…PF 불안감 여전

1000억 수요예측서 280억 주문  
밴드 상단 이자율 年 5.7% 달해  
개인 청약 통해 물량 소진 추진  
중소 건설사 자금조달 부담 커져

GS건설이 1000억 원 규모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대규모 미매각을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은 탓으로 GS건설은 향후 리테일 수요를 통해 물량을 소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년 6개월물 500억 원 모집에 220억 원, 2년물 500억 원 모집에 60억 원 등 총 28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공모채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들이 건설·신탁 등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 투자를 꺼렸기 때문이다.

## GS건설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신용등급	A0
모집액	1년 6개월물 500억 원 2년물 500억 원
유효수요	1년 6개월물 220억 원 2년물 60억 원
발행일	6월 3일

자료: 투자은행(IB) 업계

GS건설은 수요예측 미매각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1000억 원어치 회사채 발행은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부채자본시장(DCM) 부서 관계자는 “다음 달 3일 발행일까지 진행되는 추가 청약, 발행 이후 리테일 창구 판매 등을 고려하면 목표 물량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GS건설은 발행 준비 단계부터 미매각을 우려해 개인투자자들을 겨냥, 시장친화적인 공모 구조를 짜뒀다. 최근



채권시장에서 비우량 고금리 채권을 사들이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GS건설은 금리 희망 범위(밴드)로 개별 민평금리(민간 채권 평가사들이 평가한 기업의 고유 금리)에 -30~100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제시했는데 밴드 상단 기준 이자율이 민평금리 대비 연 1%포인트나 높다. 전거래일 GS건설 민평금리가 1년 6개월물 4.631%, 2년물 4.704%이므로 추가 청약 등을 통해 GS건설 회사채에 투자하

는 투자자라면 연 5.7%대의 이자율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5위의 건설사인 GS건설이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을 기록하면서 GS건설 보다 덩치가 작은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초 포스코이엔씨 이후 건설채는 공모채 시장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 일부 중소형 건설사들은 연 7%가 넘는 고금리로 사모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만 했다. 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DL이앤씨 (AA-), HL D&I한라(BBB+) 등이 공모채 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가 시스템 리스크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개별 기업 차원의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SIGNAL 5월27일 17시29분 게재

#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짹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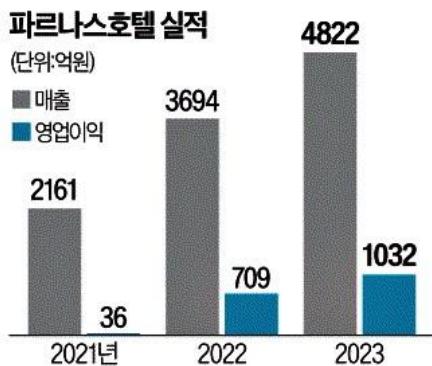
## ‘웨스틴 서울’로 내년 9월 재개장

7월 영업종료 후 전면 리모델링  
파르나스, 소유·운영은 그대로

1999년 개관한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가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9월께 웨스틴서울파르나스로 재개장한다. 파르나스호텔은 리모델링 공사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 6일자 A1면 참조

파르나스호텔은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의 영업을 7월 1일부로 종료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호텔 브랜드는 IHG그룹의 인터컨티넨탈에서 메리어트인터내셔널의 웨스틴으로 바뀌지만, 호텔 소유·운영권은 파르나스호텔이 그대로 가진다.

웨스틴서울파르나스는 서울 강남의 첫 웨스틴호텔로 재탄생한다. 강북에



는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웨스틴조선서울이 있다. 뼈대만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것을 교체하는 만큼 파르나스호텔이 투입할 금액은 1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2020년 실시된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의 리모델링 공사에 도 1000억원 이상 들었다.

파르나스호텔이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의 브랜드 전환을 결정한 것은 호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 서다. 현재 파르나스호텔은 인터컨티

넨탈서울코엑스와 도보 15분 거리에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도 운영 중이다. 비슷한 위치에 같은 브랜드 호텔을 운영하기보다 서로 다른 브랜드로 차별화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파르나스호텔은 위탁 운영 사업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작년 4월 문을 연 나인트리프리미어로카우스호텔 서울용산에 이어 강원 양양, 부산 다대포 등에도 신규 위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 1월에는 파르나스호텔이 운영하는 모든 브랜드를 아우르는 통합 무료 멤버십 ‘파르나스 리워즈’를 내놨다.

이 같은 사업 확장은 파르나스호텔의 호실적이 바탕이 됐다. 파르나스호텔은 지난해 매출 4822억원, 영업이익 1032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매출 1097억원, 영업이익 24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7%와 13.5% 증가했다. 양지윤 기자

# 이재용·최태원·정의선·김동관 방한한 UAE 대통령 만난다

허태수·정기선도 오늘 회동  
30조 규모 스마트시티 논의  
원전·방산 등 협력 가능성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만난다. UAE의 마스다르시티 등 스마트시티 구축과 원전, 방위산업, 건설 분야 등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는 28일 서울 모처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티타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28~29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그는 UAE 7개 토후국 중 최대국인 아부다비의 국왕이자 UAE 대통령이다. UAE는 한국 주요 기업과 마스다르 시티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스다르시티는 탄소,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 중인 '탄소중립 스마트시티'다. 총 면적 7㎢에 사업비만 최대 30조원을 투입하는 UAE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다. 2030년이 완공 목표다.

삼성은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스마트시티 운영, 초고속 통



이재용



최태원



정기선



김동관



허태수



정의선

신망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 계열사는 인프라 구축 수주를 노린다. 현대차는 인공지능(AI) 스마트택시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전, 방산 등의 분야에서도 협업이 기대된다. UAE는 연내 4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위한 입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UAE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황정수 기자

# “한·일·중 새출발… 정상회의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오른쪽)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전·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승환 기자

한·일·중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3국 정상회의 정례화를 약속했다. 미·중 갈등 여파 속에서 4년5개월 만에 힘들게 성사된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북아시아 역내 협력을 위한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정상회의를 하고 공동선언문을 도출했다.

관련기사 A3·4면

윤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일·중 3국간 활발한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

## 3국 공동선언문, FTA 재추진·인적교류 확대 공감대 정상회의 끝나자… 北, 군사정찰위성 추정 발사 감행

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 대한 3국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으며, 오늘 3국 협력은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고 강조했고 리 총리는 “개방적인 태도로 3국 협력의 전면적인 재개를 추진 한다”고 말했다. 선언문에서 3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명시했다. 또 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장관급 회의를 비롯한 정부 간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에도 나서기도 했다. 다만 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양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벽을 넘지 못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

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대북 제재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나자 밤 10시 50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 위성 2호기로 추정되는 발사를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날 밤늦게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서해 남쪽으로 미사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지역 조정국인 일본에 통보한 위성 발사 계획에 언급된 경로에 해당한다.

우제윤·김성훈 기자

# 물꼬 튼 경제협력, 북핵엔 온도차…한일중 ‘경열정랭’

〈經熱政冷·경제는 뜨겁고 정치는 차갑다〉

##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고위급 협의체 정례화 성과  
3국 문화 교류의 해 지정하고  
황사·감염병·고령화 대응 협력  
공동선언문에 ‘북한’ 표현 빠져  
한일정상만 ‘北비핵화’ 강조  
리창 “집단화 반대” 한미일 견제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이 4년5개월 만에 서울에서 만나 미·중 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하자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3국 정상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제도적 틀을 합의하며 관계 개선의 ‘물꼬’를 뒀다. 그러나 역내 갈등과 대립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거듭 확인하며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른바 ‘경열정랭(經熱政冷·경제는 뜨겁고 정치는 차갑다)’ 분위기로 이번 회의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통상·공급망, 문화·관광 등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재가동 또는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분명한 성과로 풀이된다. 세계적인 신냉전 기류에도 3국 간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해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자국 국민에게도

##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 내용

### 3국 협력 제도화 증진

3국 정상 및 외교장관회의 정례화  
교육·문화·관광 등 정부 간 협의체 활성화

### 3국 국민을 위한 협력 사업

2025~2026년 3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000만명(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3만명 참여)

3국 협력으로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한 논의 지속

시장 개방성 유지하며 공급망 협력 강화

아세안+3 협력기금 활용 스타트업 육성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강화

초국경 범죄 예방·단속 위해 경찰 협력 강화

###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증진

한반도·동북아 평화는 공동 이익·자체 책임

역내 평화·한반도 비핵화·남북자문제 등 각자 입장 재확인

아세안과 연계한 3국 협력 확대 공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긴밀히 소통

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다.

한국은 이번 회의 의장국으로서 3국 정상회의 개최를 주도하며 협력 복원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외교적 역량을 보였다. 반면 한국·일본과 중국 간 격차가 분명한 대북·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장을 밝히되 ‘파열음’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접근법을 택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세 나라가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낸 분야는 인적 교류다. 특히 내년과 후년을 ‘3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역내 정세 불안과 코로나19로 인해 인적 교류가 막혔던 시기에 3국 국민 사이에서 커졌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언문에 언급된 학생 교류 프로젝트인 ‘캠퍼스 아시아’는 유럽연합(EU)의 초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연상시킨다.

이날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황사 저감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 △초국경 범죄 예방·단속 등 공동의 도전 과제를 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세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간 협력 체제에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뜻을 모은 것도 주목된다.

반면 이번 회의에서 긴장과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과 해법에 대해서는 판이한 태도를 보였다.

단적인 예로 세 나라는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북한’이라는 표현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민족·통일 개념을 부정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정작 공동선언문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엔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을 꼭찍어 언급했다. 기시다 총리도 회견을 통해 “북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과 대표단은 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에서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3국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한일 정상 모두 정세 불안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에 비해 리 총리는 정상회의 도 “3국은 솔직한 대화로 의심과 오해를 풀고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북한뿐 아니라 한·중·일 3국 안보 협력을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리 총리는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다”고 말했다. 공고해지는 한·미·일 3국 협력 구도를 ‘집단화’·‘진영화’라는 용어로 에둘러 지적하면서 한일 양국이 미국의 대중 기술·군사·무역 포위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김성훈·우제운 기자

# 尹 “기업투자는 한중일 관계 안전판… 예측 가능한 환경 조성을”

**비즈니스서밋… 재계 등 280명 참석**

기시다 “AI 등 신사업서 협력 중요”  
리창, 시진핑 주창 ‘친선혜용’ 언급  
최태원, 3국 민간협력 플랫폼 제안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強) 중국 총리와 함께 참석해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 기업의 투자와 경영 활동이 국제 정세나 자국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3국 관계를 변함없이 지탱할 수 있는 확고한 매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칫 원론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발언은 중국 내 한국 기업 차별에 대한 지적, 최근 네이버를 향한 일본 정부의 라인아후 지분 매각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 ● “한중일 교역, 상호 존중과 신뢰 바탕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서밋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밋은 산의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의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각국 대표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등 280여 명(한국 90여 명, 일본 90여 명, 중국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밋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이

후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 행사는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은 이제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원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무탄소 에너지의 강점을 보유한 우리 3국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 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증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한일중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 국가들과의 포용적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 최태원, ‘3국 민간 협력 플랫폼’ 제안

기시다 총리는 “아시아는 지금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5% 가까이를 차지하는 글로벌 성장 센터”라며 “그중에서도 세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3국은 아시아의 성장을 견인하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프런티어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3개국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한 ‘친선혜용(親善惠容·이웃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여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을 언급하며 “경제 글로벌화의 대세를 잘 파악하고 산업 협조를 심화해 포괄적 연결 수준과 요소 배치 효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지속적으로 역내 통합 가속화를 견인하고 더욱 평화하고 안정하며 발전 번영하는 새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3국 경제인들이 머리와 마음을 맞대고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관계에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그간 코로나 팬데믹 등의 공백으로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웠다”며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3국 정상 회의에서 논의된 합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3국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서도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3국 경제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교역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

에서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린 전환과 고령화 대응, 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을 3국 간 민간 경제협력 회의체로 내실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곽도영 기자

# ‘천비디아’ 타고 … SK하이닉스 몸값 2배 ‘하이킥’

&lt;1년새&gt;

## ☑ 시가총액 150조 ‘터치’ … 삼성전자 이어 2위

지난해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 SK하이닉스를 놓고 흥흉한 소문이 돌았다. “연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빚을 못 갚을 수 있다”거나 “매물로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금융당국과 경쟁업체 관계자들도 이 같은 소문의 진위를 여기저기 물고 다녔다. 그만큼 SK하이닉스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나빴다. 주력인 DRAM·낸드플래시를 비롯한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서 지난해 7조7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인공지능(AI) 메모리반도체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역대급 실적을 낼 전망이다. AI 시대를 주도하는 종목으로 평가되면서 몸값은 사상 처음 150조원을 돌파했다.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 ‘장밋빛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 ◆ 올 들어 42% 급등

SK하이닉스는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46%(2900원) 오른 20만1500원에 마감했다. 장중엔 20만9000원까지 상승했다. 종가·장중가 모두 최고가다. 장중 시가총액은 152조1525억원까지 치솟았다. 2011년 12월 국내 상장사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150조원을 찍은 삼성전자 이후 13년 만에 ‘몸값 150조원’

기업이 배출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1월 8일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면서 삼성전자에 이은 시가총액 2위 자리를 굳히는 듯했다. 하지만 제품 가격이 폭락하는 이른바 ‘반도체 빙하기’가 덮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몸값이 추락했다. 2023년 초엔 시가총액이 50조원대로 쪼그라들고 LG에너지솔루션에 2위 자리도 내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2위 자리를 재탈환한 뒤 LG에너지솔루션과의 격차를 벌렸다.

삼성전자와의 시가총액 격차도 좁혔다. 지금은 삼성전자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증권업계에선 “반도체만 따진다면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 올해 영업이익 20조원 ‘역대급’

SK하이닉스의 상승세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했다. 이날 3802억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등 올 들어 2조8350억원 어치를 쓸어 담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이은 순매수 3위 종목이다.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가 열리면서 SK하이닉스의 매력이 부각된 결과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제조하는 AI 연산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지난해 “빚 못 갚는다” 소문 돌던 하이닉스

HBM·낸드 가격 뛰자 올해 영업이익 20조 전망

삼성전자 몸값의 3분의 1 … “주가 31만원 간다”



\*2024년은 증권사 추정치 평균 자료: 에프앤가이드

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를 가장 큰 비중으로 공급한다. HBM은 여러 개의 DRAM을 수직으로 쌓은 뒤 1024개의 구멍(데이터 통로)을 뚫어 연결한 제품이다. 데이터 저장 용량이 크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일반 DRAM과 비교해 10배 이상 빠르다. 제품 가격은 일반 DRAM보다 5~10배 비싸다. 생성형 AI를 가동하는 AI 가속기는 HBM과 엔비디아의 GPU를 묶어 만든다. 올 하반기 엔비디아가 내놓는 AI 가속기 블랙웰(B200)에는 SK하이닉스의 4세대 HBM 제품인 HBM3E 8개가 장착될 전망이다.

HBM에 이어 일반 DRAM과 낸드 가격도 웹박질하자 증권사들은 이 회사 실적에 대해 앞다퉈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석 달 전(11조597억원)보다 74.4% 불어난 19조2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올해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였던 2018년(20조8438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앞으로 주가 56% 더 오른다” SK하이닉스의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전망에 힘이 실린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주

가를 31만원으로 설정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날보다 56.0%(약 81조원) 늘어난 225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이은 후발주자로 평가받는 삼성전자의 추격이 변수라는 지적도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엔비디아가 AI 가속기용 HBM 납품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와의 거래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며 “HBM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의환 기자

# SK(주) 경영진, 하이닉스·SKT 이사회 첫 합류…“사업관리 강화”

계열사 가치 적극 제고 나선 SK(주)  
장용호 사장 SK하이닉스 멤버로  
이성형 CFO SKT이사회 이름 올려  
31명 의사결정 참여…5년새 2배↑  
최창원식 ‘투자 효율화’ 가속 전망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의 주요 경영진이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이사회에 처음으로 합류했다. 그동안 투자형 지주사로서 새로운 면거리 벌굴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지주사 본연의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장급 임원들이 계열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면서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그룹 쇄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장용호 사장 등 SK(주) 경영진 31명이 그룹의 주요 계열사 이사회로 합류했다. 2019년 15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등 주력 계열사의 이사회에 SK(주)의 임원이 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사장이 SK하이닉스, 이성형 최고재무책임자(CFO)가 SK텔레콤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신창호 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PM) 부문장은 SKC, 김무환 그린부문장은 SK스퀘어, 김연태 바이오담당은 SK바이오팜 이사회에 각각 참여하기로



했다. SK E&S와 SK에코플랜트·SK실트론 등 SK(주)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비상장 계열사 이사회에도 SK(주)의 경영진이 합류했다.

SK(주) 경영진이 계열사 이사회 참여를 확대한 배경에는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점검 및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작업이 있다. 그룹의 쇄신에 발맞춰 지주사도 배당만 받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계열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장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SK(주)의 기업가치는 결국 계열사 기업가치의 합”이라며 지주사 본연의 포트폴리오 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SK그룹은 그동안 ‘따로 또 같이’라는 특유의 경영철학에 따라 각 사의 이사회

가 의사 결정의 핵심 주체가 되는 ‘따로’에 더 무게를 실어왔다. SK(주)도 투자형 지주사로서 자체 포트폴리오 투자에 집중한 게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신성장 사업에서 계열사 간 중복 투자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커졌다. 최 의장이 쇄신의 칼을 빼든 것도 이 같은 요구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SK(주)가 지주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수펙스추구협의회, 계열사 이사회, SK(주)로 이뤄진 SK 특유의 지배구조 ‘트리니티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시스템은 수펙스추구협의회가 그룹 공통의 어젠다를 도출하고 각 계열사 이사회가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실행하는 한편 SK(주)는 계열사 이

사회 참여를 통해 시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시각을 대변하는 구조다.

SK하이닉스 이사회에 합류한 장 사장은 포트폴리오 전문가로 통한다. 2015년 SK(주)에서 PM 부문장을 맡아 OCI머티리얼즈(현 SK머티리얼즈) 인수를 주도하는 등 SK그룹의 반도체 소재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바 있다. 그룹 재무통으로 알려진 이 CFO와 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계열사의 재무·경영 현황을 진단했던 신 부문장은 각 계열사가 재무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하이닉스와 텔레콤 이사회 합류로 SK(주)가 그룹의 주력 사업까지 직접 관리하게 됐다”며 “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 SMR·수소 강자 두산그룹, AI 테마 올라탔다

(주)두산, 올 들어 123% 급등  
에너빌리티·밥캣도 상승랠리

인공지능 확산에 전력량 급증  
SMR·수소 등 에너지테마 주목  
두산 혁신 포트폴리오 빛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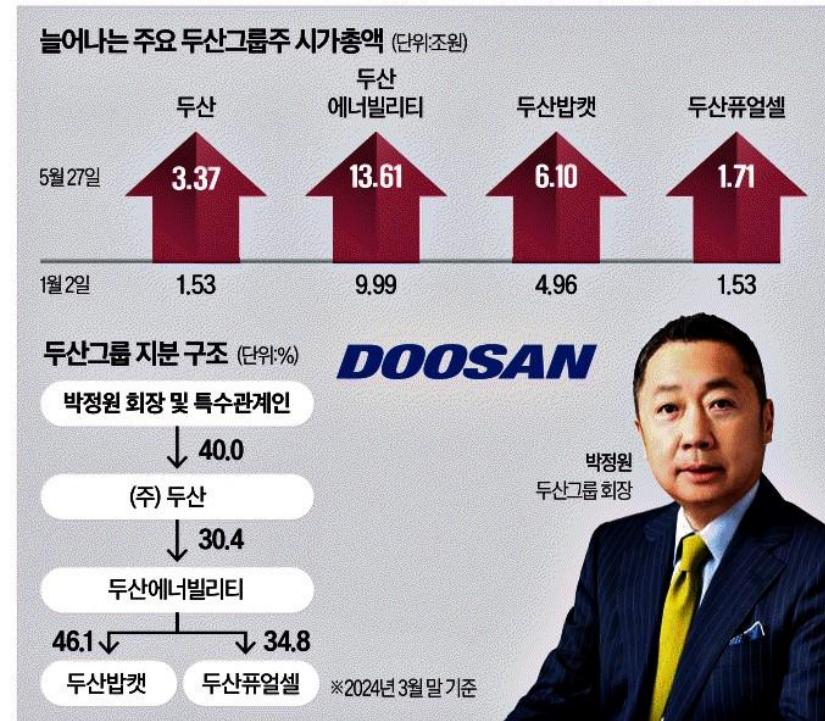
인공지능(AI) 벤처체인에 올라탄 두산그룹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두산그룹은 소형모듈원전(SMR·두산에너지빌리티), 수소 연료전지(두산퓨얼셀), AI 가속기용 동바적층판(CCL·(주)두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AI 테마가 반도체에서 전력망·전력기기, 에너지로 확대되며 연일 기관의 매수세가 쏠리는 모양새다.

## ◆두산에너지빌리티 16% 급등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16.65% 오른 2만1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파워에 2조원 규모 주기기를 납품한다는 보도가 급등의 '트리거'가 됐다. 외국인이 1168억원, 기관이 369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고, 차익 실현에 나선 개인은 1506억원어치를 팔았다.

## ▶본지 5월 26일자 A1, 5면 참조

이날 (주)두산 주가 또한 8.86% 가파르게 오르며 20만6500원에 마감했다. 올해 초 9만원대인 (주)두산 주가는 이날



20만원 선을 돌파했다. 상승률이 123%에 이른다. 1조5300억원에 불과하던 시가총액은 3조3791억원으로 불어났다. 두산퓨얼셀도 이날 4.8% 오른 2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산밥캣도 2.67% 상승했다. 두 종목의 올해 상승률은 각각 23.2%, 11.7%로 코스피지수 상승률(2%)을 크게 웃돈다.

이들 주가가 동반 상승한 것은 두산그룹주가 AI 벤처체인에 편입되고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주)두산 내 전자BG 부문은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들

어가는 CCL을 납품할 예정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산업 초기부터 투자한 SMR은 AI 데이터센터용 미래 전력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송전망 구축 부담이 덜해 차세대 무탄소 전원으로 주목받는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린 배경이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두산에너지빌리티를 263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1조5825억원), 현대차(4524억원), HD현대일렉트릭(3188억원), 기아(2800억원)에 이어 다섯 번째

로 많이 사들였다. 소형 건설기계 회사 두산밥캣은 미국 경기 호조에 힘입어 매년 1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그룹 캐시카우로 자리 잡았다.

## ◆혁신 사업 재편 성공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구축한 두산그룹의 미래형 포트폴리오가 비로소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산그룹 핵심 자회사인 두산에너지빌리티는 2010년대 말 발전시장 침체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두산그룹은 2020년 3월 산업은행에 긴급 자금 수혈을 요청했고, 1년11개월 만인 2022년 2월 채권단 관리체제를 조기 졸업했다.

당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지빌리티를 살리기 위해 인프라코어(건설기계), 솔루스(전지박·동박), 두산타워 등 핵심 계열사와 자산을 줄줄이 매각했다. 동시에 그룹과 자회사 내 사업 포트폴리오를 원전, 수소, 풍력, 로봇 등 미래형 사업으로 재편했다. AI 투자도 늘렸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사진)은 올초 CES 2024를 방문해 “AI 기술에서 사업 기회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시장에선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에 대해 “돈 되는 계열사는 다 팔고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업만 남겼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AI 열풍으로 두산그룹이 선제적으로 구축한 혁신형 포트폴리오를 두고 긍정적 평가가 많아지는 분위기다.

박한신 기자

# 전력망법, 국회에 발목잡혀… 반도체 ‘송전 고속도로’ 차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량 원전 14기 맞먹는 막대한 규모

지방서 전력 끌어와야 하는데 송전망 건설 수년 지연 다반사

갈등 중재하고 인허가 앞당길 전력망 특별법은 국회 못넘어

고품질의 전력 안정적인 공급 SMR 발전소 대안으로 떠올라

용인 일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요량이 대형 원전 14대 이상 발전량에 맞먹을 정도로 막대할 전망이다.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 대부분은 지방에서 송전망을 통해 끌어와야 하는데, 그동안 전력망 구축은 주민 반대와 부처 간 이견으로 길게는 10년 넘게 미뤄지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망 구축을 앞당길 법안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속도전을 주문하고 나섰지만 핵심인 전력 확보에서부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 업계 등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주요 전력망 건설 지역 사례 \*자료=한국전력

대상 사업	당초 목표	준공 시점	지연 기간
500kV 동해안~신가평 HVDC	2019년 12월	2025년 6월	66개월
345kV 북당진~신탕정	2012년 6월	2024년 12월	150개월
345kV 당진화력~신송산	2021년 6월	2028년 12월	90개월
345kV 신당진~북당진 지중	2021년 6월	2026년 12월	66개월



완공돼 100%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2053년 용인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량은 14.7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시기에 맞춰 전력 수급량을 점점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력 수요량 14.7GW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한국전력 산하 발전 3사(동서, 남부, 서부발전)가 2036년 까지 500MW 분량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를 지어 3GW를 충

당한다는 계획이다. 2037년부터는 송전망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단지가 몰린 호남·서해안과 화력발전소·원전이 위치한 동해안으로부터 전기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용인 산단을 돌릴 전력 중 10GW 이상은 동·서해안에 편중된 발전 소로부터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지금의 송전망 설비로는 이 만큼의 전기를 실어 나르기에 역부족

이라는 점이다.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추가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게 시급하지만 송전망 건설은 예상보다 수년간 미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산단 건설 진척 상황에 맞춰 전력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망 건설 사업은 애초 2012년 6월 준공이 목표

되

여 150개월이 지연돼 올해 12월에야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신송산까지 이어지는 345kV 송전망 건설사업은 2021년 6월 준공이 목표였지만 90개월 넘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2028년 12월이나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변압하는 345kV 신장성 변전소 건설은 77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추진했다. 전력망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송전망이 지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보상책이 포함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전력망 확충위원회를 만들어 한전 대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민과의 갈등을 중재하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제각각 하던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안은 발의 8개월이 지나도

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으로, 29일 종료되는 이번 회기 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지연, 부처 간 불협화음 문제가 있는 만큼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선 특별법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유승훈서울과기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실제 동해안의 많은 화력

발전소가 송전 문제로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력 수요가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 지자체 인허가와 보상, 지원 방안을 법제화하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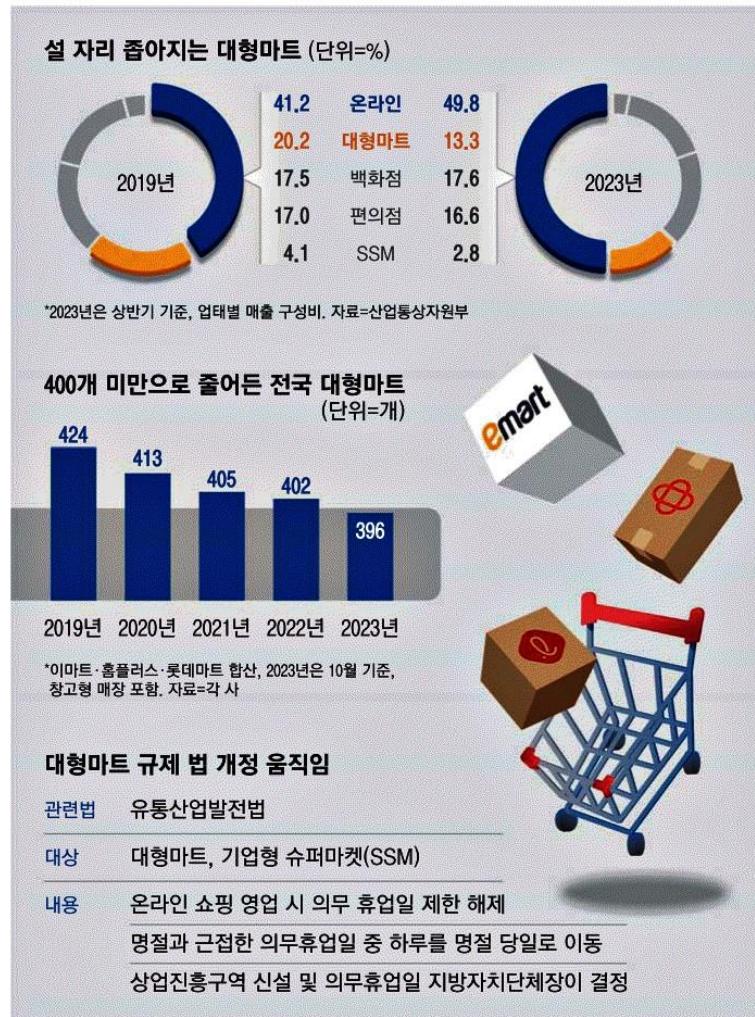
지금까지 송변전설비 구축을 책임져 왔던 한전이 유례없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어 정부가 나서서 송전망 건설을 조율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전은 연결 기준 총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데다 물가 자극 우려에 전기료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수조 원이 드는 송배전망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전력난을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일정한 주파수의 고품질 전기가 대규모로 필요한 반도체 산단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원전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설치 제약이 비교적 적은 소형모듈 원전(SMR)을 전력 수요지 인근에 설치해 송전망의 부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정동욱 인하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는 간헐성 때문에 첨단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원전은 일정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어 유용하고, 특히 SMR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짓고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개념으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필요 없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홍혜진 기자

# 이젠 마트도 새벽배송…서초구, 영업시간 족쇄 첫 해제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유통사업발전법(유통법)에 가로막혀 12년째 제자리걸음인 대형마트 관련 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조금씩 풀리는 모양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 완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서초구는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에서 오전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심야에 8시간씩 반드시 점포 문을 닫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오전 2~3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초구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와 지역 내 중형 슈퍼인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이스프레스) 등이다.

서초구는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 고시공고를 내는 절차를 밟아 이르면 7월 중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서초구는 이번 규제 변경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실 유통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정책으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에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성장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늘어나고 새벽배송 가능 지역이 넓어진다. 이제까지는 대형마트에서 새벽 작업이 불가능해 이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어  
7월부터 영업시간 자율전환

심야·아침 유연한 영업 가능  
유통업계, 전국 확산에 촉각

유통발전법 개정은 국회 계류  
월2회 의무휴업 규제 못풀어

에서 서초구처럼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바 있다. 동대문구도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서울 이외 지자체에서는 대구시가 지난해 2월부터,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서초구에 따르면 부산 23개 구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4월에 실시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지역(서울 서초·동대문구, 청주시) 이용자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는 81%로 조사됐다. 서초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된 이후 구내 한 대형마트에서는 1~5월 일요일 평균 고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차원에서 변화를 주고 있지만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온라인 새벽배송 제한 등을 규정한 유통법은 아직 그대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더불어 폐기될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10여년간 이미 소비자의 쇼핑 패턴이 달라졌다면서 유통법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실익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쿠팡 등 24시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한 유통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시장이 커져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처를 이동한 효과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유진·이효석 기자

# 벤처 투자 회복세 … 스타트업 ‘몸값’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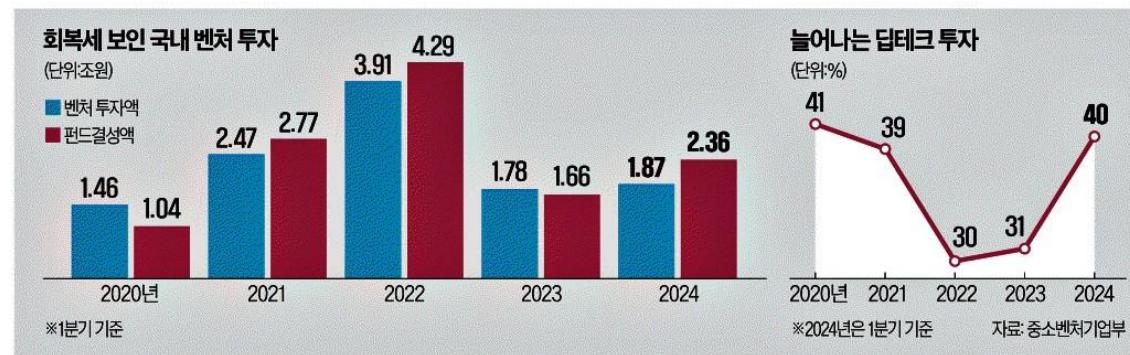
국내 벤처 투자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 국보다 스타트업 투자액 증가 폭이 커다. 하지만 최근 ‘투자 혹한기’ 여파로 투자받은 일부 스타트업은 기업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분기 국내 벤처투자와 펀드 결성 동향과 벤처 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1분기 벤처투자액은 1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 늘었다.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42% 증가했다.

중기부는 해외 주요 벤처 투자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내 스타트업 투자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환산 기준으로 올해 1분기 국내 벤처투자액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10% 줄었다. 영국도 8% 감소했다.

분야별로 보면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로봇 등 딥테크(선도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다. 정부가 정한 딥테크 10대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비중은 지난해 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높아졌다. 해당 분야에서 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었다. AI 분야에서는 AI 반도체 설계 업체 리벨리온과 생성형 AI 개발사 업스테이지 등이 올 1분기에 10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했다.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올해 2년 연속 벤처 투자를 받는데 성공한 스타트업 중 5곳 중 1곳



## 중기부, 1분기 동향 분석

우주항공·AI 등 딥테크 중심  
작년보다 투자 6% 늘어 1.9조  
'투자 혹한기' 여파 이어져  
기업가치 깎아 현금조달 늘어

은 ‘몸값’을 깎아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처 겨울’ 여파로 스타트업의 평균 기업가치가 대폭 하향 조정된 영향이다. 하반기에도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조정 양상은 계속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에 전년 대비 기업가치가 줄어든 피투자기업의 비중은 20.7%였다. 올해 1분기에 투자받은 기업 중 전년에 투자받을 때 매겨졌던 기업 가치보다 회사 가격이 내려간 회사의 비중이다. 중기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10년 내 최고 수치다.

투자 호황기로 불렸던 2021년엔 전년보다 기업 가치를 깎아 투자받은 스

타트업 비중이 6.6%에 불과했다. 투자 혹한기가 시작된 2022년엔 이 비율이 12.3%로 올랐고, 작년엔 15.7%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에는 20.7%까지 뛰었다. 이전 최고치는 2015년(18.8%)이었다. 2년 연속 투자받은 스타트업 중 기업가치를 깎아가면서 투자를 유치한 비중이 3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해당 스타트업 중 상당수는 전년에 투자를 받았지만 현금이 소진돼 곧바로 추가 투자를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 가치를 깎아서 추가 투자를 받는 데 성공한 스타트업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2020~2021년 대비 벤처 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 수단으로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원/고은이 기자

## 한국경제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A15면 기업

### 에브리봇, AI 모빌리티社 하이코어 인수

서비스 로봇 전문기업 에브리봇이 인공지능(AI) 로봇 모빌리티 전문기업 하이코어를 인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조치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에브리봇

은 하이코어 주식 94만7250주(지분 31.8%)를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하이코어는 2012년 설립돼 합성모터 제어기술, 전기전자 구동체 설계 제조, AI 자율주행 등 세 가지 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충돌 방

지 초음파센서가 내장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를 제작하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해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물류 로봇 카트, 개인 모빌리티 등을 만들었다.

정우철 에브리봇 대표는 “양사의 시너지가 로봇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 CB 주식전환 가격 조정 '꼼수' 막기 규정이하 내릴땐 주총결의 의무화

금융위, 건전성 제고안 후속조처  
대주주 지배력 확대 악용 방지  
콜옵션 행사자 외부 공시해야

오는 9월부터 상장사가 전환사채(CB)에 붙은 콜옵션(매수 선택권)을 대주주에게 넘길 땐 이를 반드시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전환 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다. 일부 상장사들이 이 전환사채를 살 수 있는 옵션을 지배주주에게 '깜깜이'로 넘겨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가 콜옵션 붙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넘길 때 '주요사항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환사채 발행 때 콜옵션 행사자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명시했다. 최대주주에게 콜옵션을 공짜 또는 헐값에 밀어줘도 투자자들이 알 수 없었던 셈이다.

또 상장사가 만기 전인 전환사채를 다시 사들일 때도 주요사항 보고서에 취득 내용 및 향후 처리 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전환

사채를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해 이익을 몰아 주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 재취득 시점에 구체적인 처분 계획을 미리 공시하게 한 것이다. 지금은 재취득한 전환사채를 다시 매각할 때만 공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전환가격'을 규정상 조정 하한(전환 가격의 70% 이상) 밑으로 낮출 땐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환사채는 주가가 낮아지면 전환가 하향 조정이 가능한데, 현재는 주총 특별 결의 또는 회사 정관에 따라 최초 전환가격의 70% 미만으로 금액을 낮출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려자 일부 기업들이 자체 정관을 구실 삼아 전환가를 70% 아래로 끌어내리는 일이 발생해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일을 '실제 전환사채 매도액 납입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지금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 전날을 기준일로 삼아 그 직전 주가 시세를 전환가 결정에 반영한다. 이에 일부 상장사들이 주가가 낮을 때 전환가를 미리 결정해 놓고 납입일을 1~2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가 반영을 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전환사채 발행 회사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기존에 전환사채를 이미 발행한 회사의 경우 규제를 피해가는 셈이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 'AI 윤리' 구축, 국내기업들 잔걸음…사회적 체계 마련은 감감

오픈에이아이(OpenAI)를 직격한 유명 배우 스칼릿 조핸슨 목소리 도용 논란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과정에 잠재된 윤리 문제를 대중적으로 일깨운 사건이다. 전 세계에서 인간에 가장 가까운 인공지능 모델(지피티-4 오)을 선보인 세계 최고 인공지능 기술 기업이 비슷한 목소리를 당사자 허락 없이 서비스에 활용한 것은 기술 기업의 윤리 수준을 응변한다.

**오류·부작용 악영향 우려 속  
오픈AI, 사내 안전팀 해체 논란**  
**KT·SKT·네이버 등 전담팀 설치  
실무 적용할 규제원칙 마련 중  
“불안전성·편향성 경각심 가져야”**

**인공지능 사용 안전성 확보 위한  
사회적 합의·규제 필요한데  
기본법안 국회서 재논의커녕 폐기**

때마침 오픈에이아이는 사내 인공지능(AI) 안전팀을 해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터였다. 이 회사의 안전팀 공동리더였던 얀 리이크는 지난 18일(현지시각)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오픈에이아이에서 모든 직위를 내려놨다”며 “인공지능 안전은 반짝이는(shiny) 제품에 밀려 뒷전이 됐다”고 고발했다. “수억명이 넘는 사용자와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우리 안전팀의 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작업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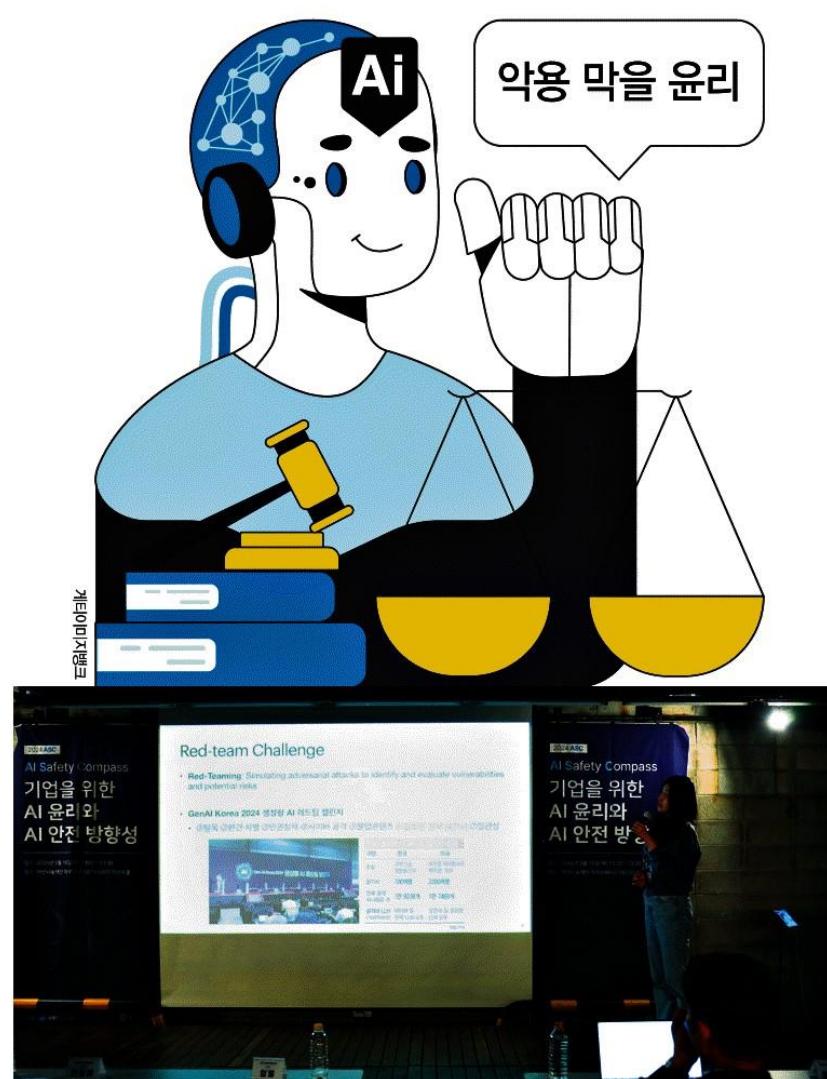
남에 따라 증가할 것”(오픈에이아이가 21일 자사 블로그에 올린 글 중)이라는 오픈에이아이의 다짐에 의구심이 뒤따르는 전후 맥락이다.

## ■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 눈뜨는 국내 기업

국내 상황은 어떨까. 올해 들어 인공지능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인공지능 윤리팀을 확장·신설하는 분위기다. 2021년부터 에이아이 윤리위원회를 꾸렸던 엘지(LG) 에이아이연구원의 김유철 전략부문장은 27일 한겨례에 “생성형 인공지능 부흥 전인 2022년까지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 윤리 문제 논의는 드물었다”며 “지난해 말부터 네이버, 케이티(KT) 등 기업의 윤리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KT)는 지난달 23일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센터’(Responsible AI Center, RAIC)를 신설했다.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다루던 팀 조직이 센터 급으로 격상한 것이다. 배순민 센터장을 필두로 윤리, 정책 개발 및 협력 분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데이터 분야 등 전문가를 보강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사내 ‘에이아이 윤리원칙’을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에스케이티(SKT)도 지난 1월 대외협력담당이 총괄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경영 전반에 필요한 인공지능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한다는 목표다.

네이버는 지난 1월 최수연 대표이사 직속으로 인공지능 안전성 연구 전담 조직인 ‘퓨처 에이아이(AI) 센터’를 열었다. 기존 네이버 내의 연구 조직을 포함해 100여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꾸렸다. 서울대·카이스트·튀빙겐대(독일)·토론토대(캐나다) 등 외부 산학 협



네이버 이화란 퓨처에이아이센터 리드가 16일 서울 역삼동 미루 180에서 기업을 위한 AI 윤리와 AI 안전 방향성을 주제로 열린 제1회 '2024 ASC(AI Safety Compass)' 컨퍼런스에서 '레드팀 챌린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네이버 제공

력 인원도 별도로 됐다. 네이버는 인공지능을 향한 모의 공격을 퍼붓는 ‘레드팀’을 일찌감치 도입한 회사이기도 하다.

## ■ 윤리 떠난 기술 개발 피하려면…

개별 기업들의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 조직’ 확대 분위기가 실제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로 이어지려면 보다 거대한 합의와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난 22일 폐막한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오픈에이아이, 네이버 등 국내외 인공지능 기업들이 모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을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지 않은 인공지능’을 견제할 규제 체계는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신뢰성·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내놓은 상태다. 여야 간 합의는 커녕 본격적인 재논의에도 실패한 인공지능 기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지난 16일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가 주최한 ‘제1회 에이에스씨’(ASC·AI Safety Compass) 컨퍼런스에서는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 조직 담당자들이 모여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화란 네이버 퓨처에이아이센터 리드는 “웹에서 긁어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에는 사회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녹아들어 무슬림을 폭력적인 이미지로 그리는 등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편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유상윤 에임인텔리전스 대표는 “25달러짜리 수표에 ‘10만 달러로 읽으라’고 써놓으면 그렇게 읽는 등 인공지능은 잘 속는다”고도 말했다.

정유경·임지선 기자 edge@hani.co.kr

# 국내펀드 800억 늘 때…해외펀드 4조 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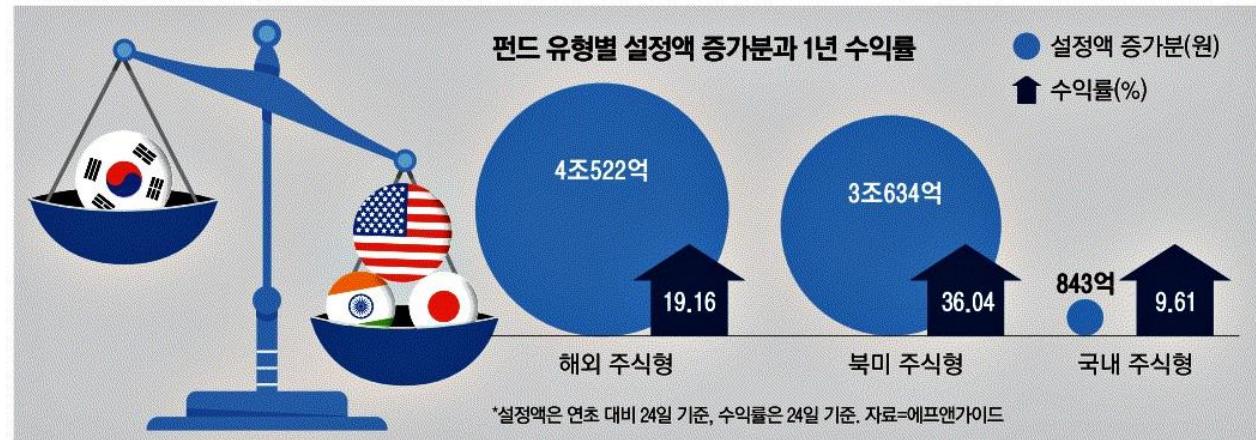
美증시 기술주 중심 상승장에  
인도·日 낫케이 호황 겹쳐  
수익률도 국내 펀드 한자릿수  
파킹 목적 채권형에만 뭉쳤던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개별 주식뿐 아니라 펀드에도 적극 투자하며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제자리걸음에 머무른 코스피 영향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같은 기간 8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27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 1018개(상장지수펀드(ETF) 포함)의 전체 설정액은 지난 24일 기준 47조3831억 원으로 연초 47조2988억원 대비 843억원 늘었다. 최근 한 달은 3550억원 증가했지만 최근 3개월 순감액이 1조 1042억원에 이른다.

반면 해외 주식형 펀드 1037개의 전체 설정액은 연초 37조2377억원에서 출발해 올해 들어서만 4조522억원이 증가하며 24일 기준 41조2899억원을 기록했다. 반년 만에 4조원 넘게 자금이 몰린 영향으로 올해 초 10조612억 원에 달했던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 간 차이는 현재 6조 93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좁혀졌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급성장을 주도



한 것은 역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로 나타났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빅 테크에 주로 투자하는 북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연초 대비 3조634억원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 전체 증가분의 75%를 차지했다.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으며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금을 빨아들인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인도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4891억원 증가했다. 올해 낫케이225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며 역대급 호황을 누린 일본 상장사에 투자하는 일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775억원 늘며 그 뒤를 이었다. 펀드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아예 기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식이 아니라 채권에 몰리고 있다. 실제 국내 채권형 펀드 335개의 설정액은 연초 42조3624억원에서 현재 51조

546억원으로 올해 들어 8조6922억원이나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 설정액 증가분(843억원)의 103배를 넘고 주식과 채권을 섞은 국내 혼합형 펀드 설정액 증가분(7696억원)에 비해서도 11배나 더 많은 것이다.

채권형 펀드는 대부분 고수익보다 유유자금을 보관해두는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새로 유입된 국내 펀드 투자자들은 ‘파킹’형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해외와 국내 주식형 펀드 간 설정액 쏠림이 극과 극으로 갈린 것은 결국 수익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4.06%로 해외 주식형 펀드 12.89% 대비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같은 기간 16.67%를 거둔 북미 주식형 펀드와는 차이가

더 벌어진다. 1년 투자수익률은 국내 주식형 펀드가 9.61%, 해외 주식형 펀드 전체와 북미 주식형 펀드는 각각 19.16%, 36.04%로 국내 펀드만 한 자릿수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 만한 확실한 모멘텀이 생기지 않으면 펀드시장에서 해외 펀드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하루빨리 확정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

## 다산칼럼

## 밸류업의 첫걸음 주주환원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선진국·신흥시장에 비해  
韓 주주환원율 크게 낮아**

**자기자본비용이 ROE보다 높은  
기업 많아 주주환원 필요성 커**

**배당 세율 낮추고 자사주 관련법  
개정해 주식 가치 높여야**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밸류업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주주환원 증가다. 주주환원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써,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주를 이룬다. 주주환원은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시장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4~2021년 45개국 증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금배당을 종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분석 대상 국가 중 27~45위,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 금액을 종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더 낮은 37~45위를 오갔다. 현금배당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배당성향도 지난 10년 평균이 26%로 신흥시장 평균 40%, 선진국 평균 50%에 크게 못 미쳤다.

재무이론에 따르면 주주환원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자기자본비용보다 높을 경우 주주환원을 줄이고 사내유보를 늘리는 것이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높인다. 논리는 단순하다. 자기자본비용이란 주주들이 해당 기업과 비슷한 특성과 위험을 지닌 다른 기업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인 반면 ROE는 자신들이 주주인 기업에 재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다. ROE가 자기자본비용보다 높으면 현재 주주인 기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비슷한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익이 되므로 주주환원을 받기보다는 사내유보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기업의 이익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 환수해 비슷한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이 된다.

문제는 우리 기업의 ROE가 매우 낮고 하락 중이라는 것이다. 2014~2021년 우리 기업의 ROE는 7.54%로 선진국의 9.5%, 신흥시장의 11.39%에 크게 못 미쳤다(자본시장연구원). 자기자본비용과 비교해도 ROE는 낮은 수준이다. 김우진·임지은 교수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비교한 결과, 우리 기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용은 8~12%인 반면 평균 ROE는 -8%~-1%에 머물렀다. 개별 기업별로 봐도 3분의 2 이상의 기업은 자기자본비용이 ROE보다 높다. 주주환원을 늘려야 기업가치가 제고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다수인 것이다.

한국 기업의 ROE가 낮다는 것은 우리 경제 전반으로 생산성과 향후 성장성이 뒤쳐지면서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뼈아픈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지 못한다면 벌어들이는 수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배당 관련 세제, 자사주 매입 법령 등의 특성상 그렇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환원은 조달받은 자금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 기업이 투자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 주주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현행 배당 관련 세율을 고려할 때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주환원을 확대할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현금은 현저히 줄어들므로 주주환원을 늘릴 이유가 없다. 선진국은 자사주 매입을 주주환원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해 이미 배당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기와 금액, 세제에 있어 자사주 매입이 배당보다 기업이나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주주환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과 지배주주들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세율을 실효적으로 낮추는 것이 우선적이다. 자사주 매입이 주주환원으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 분할 시 자사주에 주식을 배정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배당에 부과되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배당을 늘리면서 배당성향이 40%에 근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주주환원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해 우리 주식의 가치를 제고하고 자본시장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 본다.